

민주당 '범비명계' 원내·외 세규합 가시화

10일 이낙연계·원칙과상식 토론회 비주류 플랫폼 '이재명 체제' 압박 이낙연, 강성지지층 출당청원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친이낙연계 시민모임과 민주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오는 10일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비명계 중심으로 원내외 세 규합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친이낙연계 시민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실천행동)은 10일 예정된 민주당 내 혁신을 자처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상식' 이마련한 '국민과 함께 토코쇼'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원칙과상식은 지난 3일 "당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대규모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예고했다.

당시, 원칙과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당원들, 비주류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게 여태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다 모여라'라고 한다고 모이지 않을 거 같아서 1차적으로 연락해서 한번 모임을 하고,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실천행동측이 이날 원칙과상식의 제안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천행동은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주축인 원외시민모임으로 알려졌다. 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병석 '모색과 대안' 대표와 이낙연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김효은 전 선대위 대변인 등이 활동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의 김종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말 개설된 실천행동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치가 무원칙 비상식

의 늪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이 이대로 그냥 가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해 온 정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끔히 씻어 버렸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고 사당화가 완성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참석 가능성에 대해 "어느 분이 올지 확정된 게 아니다. 하지만 올 수 있는 분은 다 초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신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출당 청원에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

다. 이 전 대표는 '몰아내주길 바라냐'는 진행자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나"라며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정국 역할론에 대해 "제 개인의 무슨 공간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고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은 당연히 합직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고 "내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길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다. 기다림이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당내 상황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이 대표 체제 비판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국무총리 3인이 '반(反)이재명' 연대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 이 전 대표가 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걸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개호 의원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 발표

이개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며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운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운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與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최영호 전 남구청장, 9일 보성서 출판기념회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출마 예정자·사진)가 오는 9일 오후 2시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최 전 정장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대한 한위반"이라며 "정치가 나서서 지역민을 대리해 위헌소송과 '농어촌 지역민배상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 실현방안은 '농정·농업혁명', '제2의 농지개혁', '농민소득, 지역소득 실시' 등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판하는 책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는 저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혁신적으로 지역을 바꾸겠다는 강한 신념과 지역농민과 인구소멸에 대비한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최 전 정장은 책에서 지역의 인구지역소멸에 대한 발상전환과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최 전 정장은 보성에서 태어나 최근 한국 전력공사 상임감사를 지냈다. 최황지 기자

정준호 변호사, 9일 '끈기의 정치' 출판기념회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사진)는 '끈기의 정치! 정준호, 한다면 꼭 해냅니다!'를 출간하고 '거침없이 삼세판'이란 슬로건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 동신고등학교체육관(장원관)에서 출판기념회(북&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력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광주를 고민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사신 분들의 삶 그 자체를 듣고 여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노정렬 개그맨 사회로 진행되며 난타공연과 부채춤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행사에서는 '정준호에게 묻는다' 축하 영상 및 질의응답, 2부 행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북&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북구갑 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선대위 조직3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은지 기자

"중대재해법 유예, 정치적 도구 전략 막아야"

당정 개정 논의...민주 미온 입장 광주노동계 "민주, 총선 눈치만"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총 광주본부 측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은 고위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0만여개의 대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당장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 기간 동안 법 시행을 준비할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논의의 문을 열어놨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려면 법 공포 3년 뒤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준상 민주노동총 광주본부 건설노조 조 직국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눈치보느라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2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며, 이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1건뿐이다.

김은지 기자

딤페이크 선거운동, 총선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딤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딤페이크 선거운동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월 11일부터는 딤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김선욱 기자